

김상훈의 세상읽기

1000원 지폐의 가치 있는 변신

서비스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대에 들어서서는 아예 잔돈의 지위로 내려갔다. 1990년대, 2000년대의 100원이나 500원의 위치가 된 것이다. 불어빵 한 봉지도 사기 어렵고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고작 생수 한 병일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드물어졌다.

#2

하찮은 존재로 전락한 1000원이 최근 광주지역 자치단체들에 의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먼저 광주 서구의 ‘천원의 동행’시리즈를 통해 나눔과 배려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단 돈 1000원에 우리 밀로 만든 국수를 먹고 택시도 탈 수 있고 아이도 맡길 수 있는 등 착한 복지정책을 확장해 나가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3년 3월 양동시장에 처음 문을 연 ‘천원 국시’ 1호점’은 노인과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 1000원에 지역 생산 우리밀로 만든 국수를 판매하는 가게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된 이곳에는 22명의 노인들이 파타인으로 일하며 1일 100그릇씩의 국수를 한정 판매하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맛으로 점심시간마다 장사친이다. 지난 6월 유덕동에 ‘천원 국시’ 10호점이 문을 열 정도로 인기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리밀 소비 촉진, 지역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서구는 또 중증질환자들이 병원 이동 시 1000원만 내면 되는 ‘천원택시’도 지난 6월부터 광주 최초로 운영하고 있고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천원 긴급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활 참여자가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세탁물 수거·세탁·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돌봄형

서비스인 ‘천원에(媛) 드림세탁’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

#3

광주 광산구는 1000원에 민생경제 활성화 ‘아이콘’이라는 가치를 부여했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통한 소비 촉진을 위해 12개 정책과제를 실행하는 ‘천원 더가치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주택가·골목상권 주변 9개소 공영주차장의 2시간 주차요금을 1000원으로 낮춘 ‘천원 주차장’을 운영해 주민 이용률을 높여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천원페이백’ 제도를 도입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추가적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천원 거리’를 조성해 야간 시장 및 상가별 특색있는 천원 물품 판매와 길거리 버스킹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취약계층에게 공나물국밥 한 그릇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한끼’ 식당은 지난해 5월 송정 1동에 처음 문을 연 이래 현재 4곳이 운영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도·농 복합도시인 지역 특성상 평동, 임곡동, 동곡동 등 36개 마을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천원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천원 수거보상제’, ‘천원 기부’, ‘천원 문화마실’, ‘천원 파크골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원’을 활용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외계층이 힘든 겨울이다. 민생경제 활성화와 이웃배려를 상징하는 귀한 몸으로 거듭난 1000원이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해주길 바란다.

주말



#1

1000원짜리 지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 중인 지폐 중 가장 액면가가 낮다. 전면부에는 조선시대 유명 사상가이자 유학자인 이황,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매화나무, 수학을 했던 성균관 명륜당이 그려져 있다. 후면부는 그가 생전에 학문을 닦고 연구한 도산서원의 초창기 모습을 묘사한 겸재 정선의 ‘계상정거도’가 사용됐다.

1975년 처음 발행됐을때만해도 그 가치는 상당했다. 당시 대중교통 이용이 100원·500원짜리 동전만 있으면 가능했던 시절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은근히 많았다. 1000원짜리 짜장면을 파는 중국집이나 1000원짜리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도 많았다. 과자 2~3개는 거뜬히 살 수 있었고 김밥천국에서 판매하는 김밥 1줄에 1000원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어졌다. 일부 편의점과 1000원 생필품 상점이 그 명맥을 유지했지만 실상 사려고 하면 살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었다. 대부분의 과자들이 1000원 따위는 가볍게 넘겼고

기고

김현철



전남연구원 부원장

문화와 예술을 기점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이끈 르네상스는 15세기 인구 10만명 규모의 피렌체에서 출발해 유럽, 나아가 전 세계로 영향을 가져다줬다. 유라시아 대륙 동편 끝 대한민국, 그곳에서도 서남단의 전남이 새로운 글로벌 관광 르네상스를 열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내세운 ‘방한객 3000만 시대’의 성패는 세계적 콘텐츠 발돋움할 전남의 매력에서 비롯된다는 확산에서다.

전남은 삶의 터전이자 생명 자원의 보고인 바다, 그 위에 섬, 기암절벽과 능선을 품은 산, 문명의 태동과 함께 흐른 강들이 아우라진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다.

전남이 보유한 매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불교와 선비 문화를 대표하는 지리산·조계산·백운산·두륜산 등은 명상과 치유의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강진·해남의 고려·조선왕조 유산, 나주의 고대 역사·문화, 담양의 정원과 가사문학, 보성의 차 문화는 전남만의 깊이 있는 문화적 층위를 형성한다.

때마침 여는 정부보다 정책의 실용성에 주안점을 둔 새 정부와 경쟁력을 꾸준히 축적해 온 전남도는 방대한 관광자원을 어떻게 묶어내고, 또 국정과제와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

고 있다.

이중 최근 국정과제로 제시된 글로벌 관광특구는 전남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더해 광양·여수·순천·고흥·보성 등을 아우르는 동부권 해양관광벨트, 목포~신안~무안~함평~영광 등으로 연결되는 서부권 생태관광벨트, 영암~해남~진도~완도~보성~장흥 등으로 이어지는 남해권 역사·문화관광벨트, 장성~담양~곡성~구례 등이 함께하는 체류형 힐링벨트 등 권역별 차별화된 강점은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도약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전통 식문화와 미식, 사계절 축제, 공연예술 등이 결합되면 전남은 자연과 문화가 융합된 K-컬처 관광 허브로 도약할 것이다.

또 전남은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조성한 해양치유 인프라와 해수, 해조류를 활용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웰니스 치유관광시대를 선도하기에도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관광정책 성공의 필수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접근편의성 제고를 위한 교통 인프라다. 지난 9월 개통된 남해안철도 보성~임성리 구간은 전남 서남권 접근성을 대폭 높여 남해안 남부권의 동·서간 교류시대를 여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조만간 완성될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또한 전남을 수도권과 2시간 생활권으로 묶어 국내·외 관광 수요를 끌어내는데 결정적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해 서남해에 걸친 전남의 해상교통 활용도 필수

적이다. 목포와 여수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크루즈 노선 확대와 더불어,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연안 크루즈,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도입 등은 섬과 해양 관광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전남은 열거하기에도 벅찬 다양하고 매력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정책적 지원, 지역 주민의 참여와 창의적 기획이 더해진다면 전남은 더 이상 변방의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세계인이 반드시 찾아야 할 K-컬처 관광의 성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외래관광객 1명당 평균 1500달러의 지출, 관광소비 1억원당 약 20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최근 분석에서 보듯,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는 복합적이고 막대하다. 이는 지역성장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국가균형발전과도 맞닿아 있다. 결국 전남 관광은 단순한 경제효과를 넘어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과 자존을 불어넣는 미래산업으로, 전남은 글로벌 관광 르네상스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내건 ‘2030년 외래관광객 3000만 시대’, 결국 그 성패는 지역이 얼마나 독창적인 매력을 세계적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전남은 이미 그 해답을 품고 있다. 전남인(人), 공간, 자원 모두가 그 자체로 보물이며, 이제는 이를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선보일 차례다. ‘매력을 파는 전남’은 구호가 아니라 글로벌 관광 르네상스를 여는 출발점이다.

사설

전남 13개 군 ‘소멸 고위험’ 대책 아직 없다

전남 13개 군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이는 전남 22개 시·군 중 60% 가까운 수치다.

소멸 고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가 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2 미만인 지역을 말하는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곳을 의미한다.

참고로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1.5 이상이면 ‘낮음’, 1.0~1.5 미만 ‘보통’, 0.5~1.0 미만 ‘주의’, 0.2~0.5 미만 ‘위험’, 0.2 미만 ‘고위험’ 등 5개 단계로 구분한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변화상’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위험지역에 진입한 전남의 지난해 소멸 위험지수는 0.32다. 위험 단계라는 얘기다.

전남도내 지자체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5년 고흥 1곳에 불과했던 고위험 지역이 지난해 고흥을 포함해 담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군 등 13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폭이 전국 평균 감소폭을 크게 상회하고 고령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등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2015~2024년) 이들 지역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1.63%로 이 기간 전남과 전국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각각 -0.72%, -0.07%였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너무 크다.

이들 지역의 고령화 비율 또한 2015년 30.7%에서 지난해 39.4%로 8.7%p 상승했고 청년 비율은 전국 평균(10.7%)을 밑도는 10.4%에 그쳤다.

여기에 이들 지역 고령 1인 가구비율은 23.5%를 기록, 전남지역 고령 1인 가구 비율이 16.1%를 크게 웃돌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이들 지자체의 인구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일 정책이나 예산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 양립 및 청년 지원, 교통·공공서비스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광양 ‘산업위기 선제대응’ 전화위복 계기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 9월 30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지 50여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광양시는 이날부터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다. 철강산업 위기로 지정되기는 8월 포함에 이어 두 번째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잠재 위험에 직면했을 때,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산업분야 특별재난지역을 뜻한다.

사실 광양시는 수십 년간 철강을 기반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온 곳으로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충남 당진, 경북 포항과 함께 국내 3대 철강 도시로 불릴 정도였다.

하지만 국내 철강산업이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면서 단가 하락 등 가격 경쟁력을 잃어 내수부진에 빠졌고 여기에 미국이 올해 6월부터 철강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며 수출 역시 심각한 부진에 빠져 광양 지역경제는 그동안 크게 위축돼 왔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광양시는 올초부터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난 2월에는 포항·당진시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으며,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대응 간담회, 광양·순천 상공회의소 공동 건의, 여수·순천·광양 3개 시의 경제위기 극복 공동선언 등 다각적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정부는 광양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 등의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정책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경영 자문, 고용안정 등 지원 사업 예산들을 적극 반영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 해소를 위해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재편과 수급 조절 유도 등의 방안을 담은 ‘K스틸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위기에 빠진 광양 철강산업이 경쟁력 있는 저탄소·첨단 산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부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ыл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